

청년정책의 흐름

‘청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림 1〉 '청년' 키워드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검색 결과: 1990~2015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검색 결과(<http://www.kinds.or.kr/>), 검색일: 2016.05.10.; "서북경(2016, 217)" <그림 2> 인용. 그림에서 박스 안에 든 단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관어 검색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검색된 연관어 리스트 중 1·2위를 차지하는 단어들을 나타낸 것임.

청년단체,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시켜야” 1만명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청년기본법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2015년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2016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세종시

2017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2018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이후
전국 광역시·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청년정책이 기존의 고용대책을 넘어
주거, 부채경감, 교육, 문화, 사회참여 등
정책의 전화의 계기가 됨!

광주는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계층별실태조사,
광주청년부채실태조사,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진행

청년정책은
무엇인가요?

‘눈먼 돈’ 드러난 청년수당 300만원, 이제라도 없애야

HOME > 사회

네 청년정책 부숴버릴 거야

☞ 전해원 기자 | ☞ 호수 437 | ☞ 승인 2016.02.01 01:19

인전/특시 ▼

'선진복지'냐 '포퓰리즘'이냐...법정가는 '청년수당'

“용돈말고 일자리를” VS “취업에 도움” 청년수당 시민사회도 갈렸다

서울시·복지부 대립 속 시민들도 찬·반 갈려
“용돈보다는 일자리 창출해야...실효성 의문”
“미취업 청년에게 필요한 혜택...지원 마땅”
“복지부 승소해도 수당 환수 어려워” 우세

등록 2016-08-07 오후 3:20:34
수정 2016-08-07 오후 5:54:41

가 가

경제

서울시 '청년수당' 제동...정부·지차제 갈등 증폭

2015년 11월 13일 06시 04분 댓글

2016년 청년정책네트워크 6대 의제 제안

민관협력을 통한 '광주청년권리헌장' 발표,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청년부채실태조사와 경감 및 지원 대책 수립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청년배.수당 합의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적 공간의 확대



▲ 광주지역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넷)'이 10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에 '광주청년정책 6대 의제'를 제안했다.

제 2조 (기본이념)

-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마련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의

-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¹⁾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으로 '기본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정해 두었어요. 헌법에 정해 둔 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어요.

자유권이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이나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 구속²⁾을 당하지 않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어요.

평등권이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또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에요.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이란?

이행기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교육제도를 벗어난 청년이 안정성과 자율성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 ① 이행기 도중에 발생하는, 불안정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 ② 이행기를 종료하고 자율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20대 청년 숨진 사업장, 안전점검 없어

입력 2020.05.28 (09:27) | 수정 2020.05.28 (09:27)

뉴스광장(광주)

0 0

가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 ✓ 어쩔 수 없이 1,2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한다면 / 옮겨 다니고 있다면 한 발 뒤로
- ✓ 4대 보험을 받지 못한다면 한 발 뒤로
- ✓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면 한 발 뒤로
- ✓ 이성 애인이 있는 척한 척 있다면 한 발 뒤로
- ✓ 어렸을 때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면 한 발 앞으로
- ✓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 ✓ 학교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종종 부끄럽다면 / 말할 수 없다면 한 발 뒤로

당신은 **[어디에 선]** 청년인가요?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② 청년건강 증진
-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 문제영역과 광주시 정책 대응 영역>



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정책만으로
청년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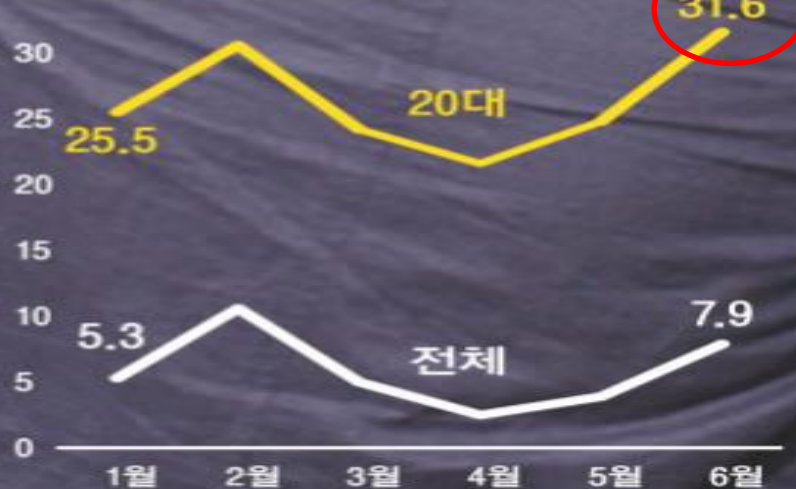
연령대별 구직급여 현황 비교

단위: % (2019년 1~8월 대비 2020년 1~8월 기준), 명(2020년 1~8월 기준)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단자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개인파산 접수현황 비교

단위: 명



자료: 박정·이탄희·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호한 고용관계 및 비임금근로자 중 청년노동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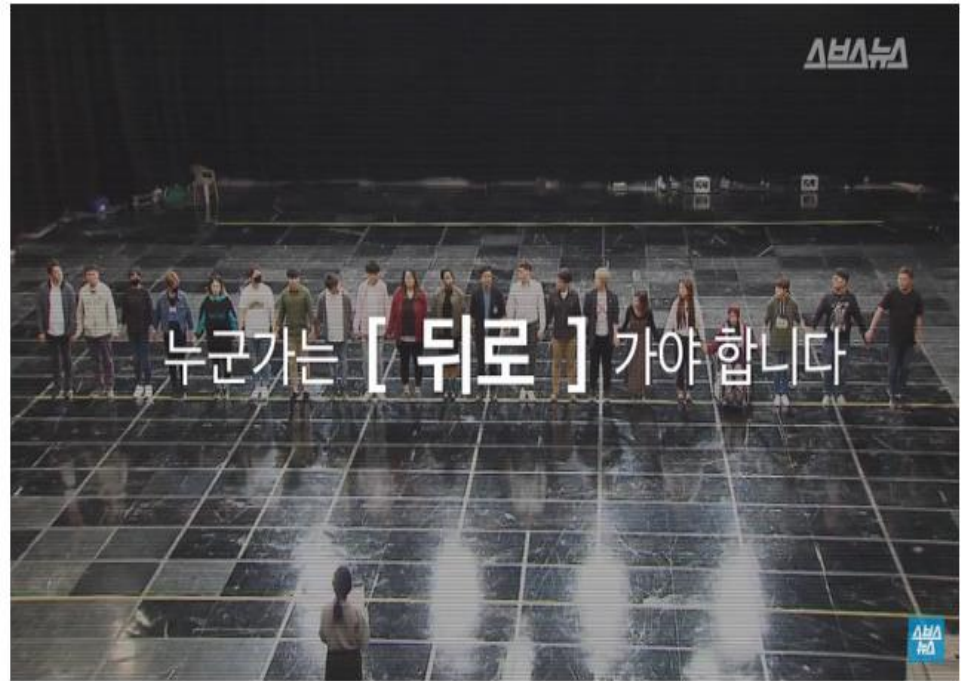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539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청년 자영업자는 86만 명에 해당 (김규혜, 2020)
- 이전의 노동시장 관련 분류체계는 급증하는 ‘기타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기타 자영업자’는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2021년, 지금, 청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

보편성 확대, 정책 내용.방법 다양성, 청년의 사회참여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의 출산이 던진 질문..."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받아들이 준비됐나요?"

👤 경남 김해시 김나희 | 🕒 승인 2020.11.28 05:31 | 💬 댓글 0



뉴스룸 | 최신기사

여가부 '다양한 가족 포용하는 정책' 수립 위한 국민 공청회

송고시간 | 2021-01-24 12:00



오예진 기자

[기자 페이지](#)

947회
로또당첨결과

3 8

| 26일 유튜브 생중계...실시간 댓글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드러난 숫자,
드러나지 않는**

청년의 삶

**코로나19로 드러난
청년의 생활과 생존사이 어딘가**